



2023.04.17.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66호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소득과 고용 분야 정책지표: 현황과 과제



이선화(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66호

ISSN 2733-8258

발행일 2023년 4월 17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도서관 5층 국회미래연구원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물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소득과 고용 분야 정책지표: 현황과 과제전략*

이선화(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CONTENTS

1. 미래사회 대응지표와 정책 모니터링 연구	05
2. 경제적 삶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미래환경 변화	06
3. 지표 분석	09
4. 정부 대응정책의 문제점	16
5. 미래 정책 과제	19

* 민보경 외(2022), 『정부의 미래대응 정책 모니터링』중 제2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함

• 소득과 고용 분야 핵심 지표 분석과 정책평가를 통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환경 전망의 결과

- 비교적 낮은 시장소득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낮은 공적 사회복지지출로 인해 처분가능소득의 불평등도가 높음
- 국민연금의 미성숙에 따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그 결과 노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도 가장 높게 나타남
- 청년층과 여성은 고용률이 낮은 취업 취약계층으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취업 기회가 더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
- 사회보험제도는 소득과 고용의 안전성이 높은 계층에 대한 보호 수준이 높은 이중구조,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특징으로 함
- 제조업 분야에서 자본심화지수의 상승 속도가 가파르며 이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하게 됨을 의미

•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미래의 정책환경 변화와 조화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 의제

- 인구 영향이 큰 복지제도의 경우 제도 성숙화에 따른 지표 변화를 반영하여 복지제도의 동적 이동 경로를 설계. 예를 들어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재정사업은 국민연금의 성숙도에 연계하여 재구조화
- 지속가능 복지체제의 경우 국가의 전체 구성원들 간 타협과 조정이 중요하므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상설화하여 국민적 공론화를 주도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으로 비정형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정형화된 고용보험 체제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우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와 같은 보다 보편적 제도로의 전환이 바람직
- 새로운 사회안전망 패러다임으로는 사회보험을 통합하는 '소득 중심 전 국민 사회보험'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실시간 소득 및 매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사회보험 징수 시스템 구축이 관건

1. 미래사회 대응지표와 정책 모니터링 연구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흐름을 읽고 이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정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의 적절성 및 정책에 대한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미래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러한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민보경 외(2021)는 주요 미래비전으로 ‘스마트 성장 사회’,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핵심 전략, 세부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미래지표를 제시하였다. 이 중 ‘스마트 성장 사회’로 가기 위한 핵심 전략은 ‘디지털 전환 대응’, ‘기술혁신형 경제로의 이행’, ‘지속적 성장과 사회혁신을 통한 양극화 완화’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이 중 ‘지속적 성장과 사회혁신을 통한 양극화 완화’라는 전략 목표를 위해 소득분배와 고용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분석하고 사회안전망 분야의 핵심 정책의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구조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세입 기반 위축에 대응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을 도출하였다.

2. 경제적 삶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미래환경 변화

소득과 노동은 개인의 경제적 삶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국민경제 단위의 분석에서는 국가의 경제규모나 평균 소득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삶의 질에는 전체 국민소득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 근로능력이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소득을 획득하므로, 한 국가의 고용 여건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소득분배 및 빈곤인구의 비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개인의 노동시장 참여는 소득에만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생산활동을 통해 사회적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도 의미가 있다.

민간의 경제활동에 더해 현대 복지국가의 경우 정부의 이전지출(조세, 연금과 재정지출)이 개인이 실제 소비나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에 미치는 기여도가 매우 높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을 기준으로 보면 정부 부문이 개인의 소득 재분배에서 담당하는 공적 사회복지지출의 규모가 GDP의 20%에 달한다. 결국 국민경제에 속한 개인의 경제적 삶은, 사회 내에서 취업이나 사업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기회, 취업이나 사업 등 경제활동을 통해 직접 벌어들인 수입(시장소득), 정부의 조세·재정 프로그램을 거쳐 재분배된 소득(처분가능소득)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의 기간 동안 先성장 後복지라는 성장 우선 패러다임을 추구해 왔으며 그 결과 선진 복지국가에 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투자에 소극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기를 거치면서 고도성장과 완전고용을 축으로 하는 사회적 복지의 틀이 붕괴하면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 등에서 사회보장정책이 강화되어 갔으나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약 12%로 OECD 국가 평균(20.0%)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2019년 기준).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지표 간의 괴리는 계속되었다. 즉, 세계 10위의 경제규모, OECD 21위의 1인당 소득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OECD '삶의 만족도 지수(Better Life Index)'에서 우리나라는 35개국 중 28위에 머물고 있다.

사회안전망의 강화는 현시점의 삶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미래의 정책환경 변화를 감안하면 그 정책적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초고령화 및 1인 가구 급증, 생산인구감소와 생산성 둔화에 따른 저성장, 4차 산업혁명으로 통칭되는 인공지능·로봇·디지털 기술혁신이라는 시대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은 가족 내 부양능력 저하, 소득 양극화의 심화, 고용의 불안정성 증대와 같은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견된다. 불평등, 불균형,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규모와 무관하게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불평등의 심화는 역으로 인적자본 투자 및 생산성에 악영향을 주거나 사회정치적 갈등을 심화시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고령화, 저성장,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보건복지부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2019. 2. 12.)에서 제시한 ‘포괄성과 보편성에 기초한 사회보장 패러다임 구축’의 정책적 배경을 이룬다. 이하에서는 인구구조, 기술혁신의 속도와 산업구조, 불평등 등 소득분배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환경에 대한 향후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첫째, 인구는 노동공급, 성장, 소득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일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환경에도 결정적 역할을 한다. 통계청(2021)의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을 정점으로 하락세가 시작되었으며 2030년 5,120만 명, 2070년에 3,766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이하 중위 시나리오 기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경제의 주축을 담당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0년 총인구의 72.1%에서 2030년 66.0%, 2070년 46.1%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65세 이상인 고령인구는 2022년 902만 명(총인구의 17.5%)에서, 2030년 1,306만 명(25.5%), 2070년 1,747만 명(46.4%)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총부양비, 즉 생산연령인구 1백 명당 부양인구(=유소년인구+고령인구)는 2020년 39명에서 2070년 117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노인부양비는 2020년 21.8명에서 2030년 38.6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며 2070년에는 100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경제성장률의 경우 2030년 1.8%로 2%를 하회하며, 2050년에는 0.9%로 1%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22).

1) 이러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의 거시경제학 분야에서 다수 수행되었다. 대표적으로 Aghion et al.(1999)는 교육 투자의 실패를, World Bank(2005)는 기회의 불평등에 따른 투자의 저해를, Rodrik(1999)는 대외적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근거로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Acemoglu, and Robinson(2012)는 포용적인 제도가 개인의 노동, 투자, 혁신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기 때문에 생산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한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기술혁신의 확산은 일자리의 수와 근로형태를 바꾸어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기술이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기존의 전통적 일자리를 잠식하는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기계에 의한 인간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현실에서 노동의 역사는 단선적으로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최근 한국을 대상으로 한 기술투자 및 고용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향후 새로운 기술 확산에 의한 일자리 감소를 지적하는 결과들을 다수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본심화지수(근로자 1인당 자본스톡)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로봇 밀도(제조업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수) 역시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자본심화지수의 상승은 노동 절약적 투자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저금리에 따른 자본재 상대가격의 하락이 주요하였다(Karabarbounis and Neiman, 2013). 다만, 자본재 상대가격의 하락으로 첨단 장비투자의 비용이 하락하였다는 조건은 동일하지만 한국에서 자본심화의 속도가 더 가파르게 진행된 데에는 노조 회피나 작업장에서의 숙련 경시 등이 배경이 되었다는 설명이다(정준호·전병유, 2019).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대 초반까지 제조업의 GDP 대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로 제조업 고용비율은 계속해서 하락하였다.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진행된 것인데 이에 대해 정준호(2018)은 노동절약적인 자동화 투자, 경영 및 숙련 형성 과정에서의 노동 배제를 이유로 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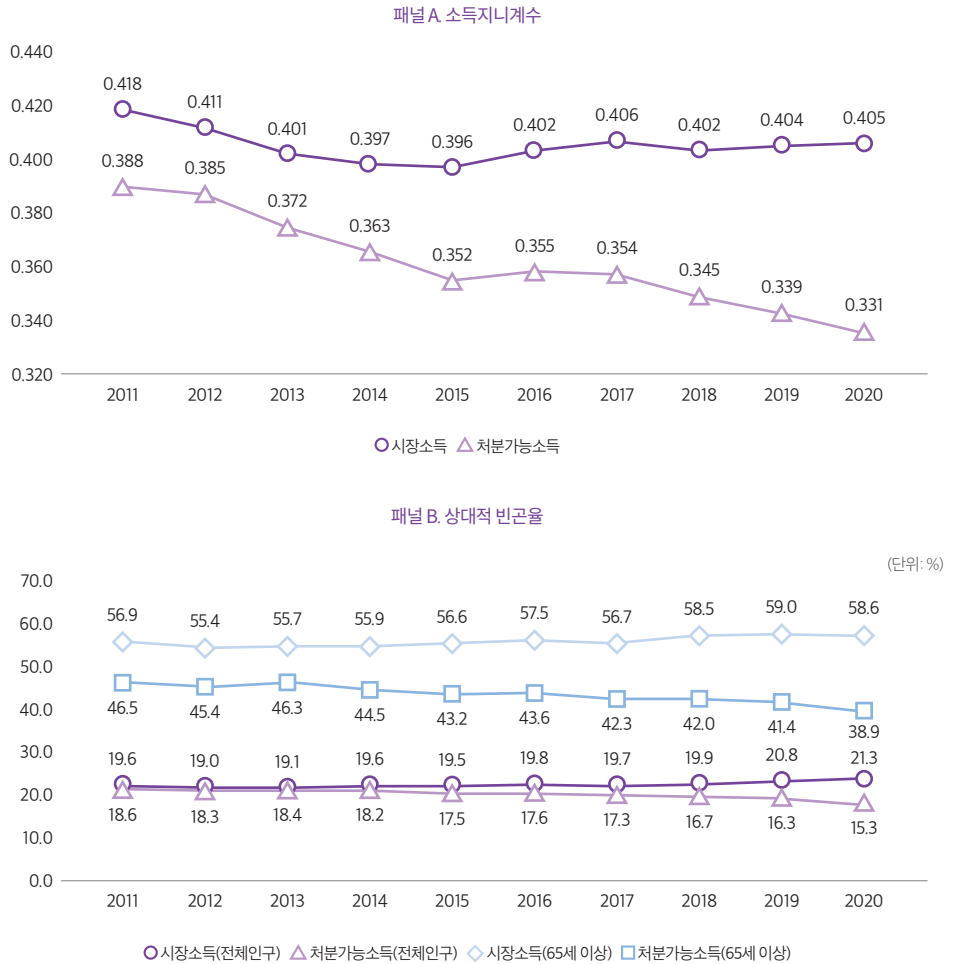
세 번째 키워드는 불평등의 심화이다. 경제성장, 소득분배, 고용은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안전망의 정책 대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지만 반대 방향의 인과관계도 성립한다.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는 경제의 역동성, 건전한 민주주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사회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기업가 정신과 혁신에 미치는 순기능을 강조했던 전통적 경제이론과 달리 최근에는 성장과 제도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World Bank(2005)에 따르면 경제적 불평등은 지대추구 행위와 권력 집중을 초래하여 재산권 제도를 훼손시키며 결국 시장이 건전하게 작동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사회적 신뢰에 악영향을 미쳐 생산과정에서의 협력과 생산성 발전을 저해한다(Wilkinson, 2018). 소득 불평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래사회 대응 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 분야 간 지표들과의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제기된다.

3. 지표 분석

가. 소득분배지표

소득분배는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을 통해 확인하였다.²⁾ 분석에 사용한 소득은, 가계가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시장소득과 정부의 재분배정책이 반영된 처분가능소득(= 시장소득+ 공적이전소득-공적이전지출)을 함께 사용하였다.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분배 추이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그림 1]의 패널 A).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2010년 0.418에서 2014년 0.397로 크게 하락하였다가 2020년에는 0.405를 기록하였다. 2010년대 후반기 들어 소폭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유의미한 변화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시장소득과 달리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2010년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 삶의 질에 대한 정책의 강화로 정부 재정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결과이다. 그 결과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으로 평가한 지니계수의 차이는 2011년 0.03에서 2021년 0.074로 커졌는데, 이는 소득 재분배에서 정부의 공정정책의 영향이 확대하였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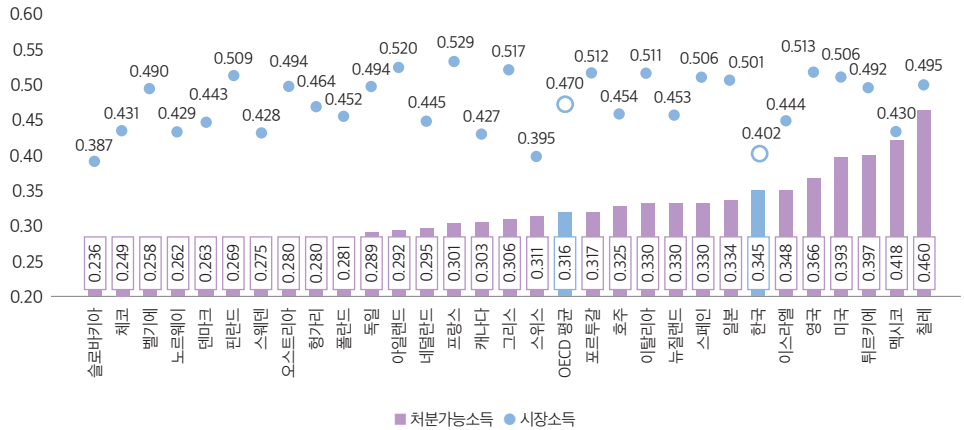
2) 이밖에 우리나라 소득분배의 다른 특성은 소득 경계값 비율이나 팔마비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민보경 외, 2022, 21~23쪽).



* 자료: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그림 1> 한국의 소득분배지표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시장소득으로 평가한 불평등도는 낮은 편이지만 처분가능소득으로 평가한 불평등도는 높은 국가에 속한다. 2018년 우리나라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02로 30개 국가 중 3번째로 낮으며 OECD 35개국 평균인 0.470보다 0.068이 낮았다. 반면,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45로 아래 그래프의 30개국 중 7번째(35개국 중 27위)이며 OECD 평균값인 0.316보다 0.029가 높았다. 한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OECD 국가 중 양호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가 높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공적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 자료: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 주: 1) OECD 39개국 중 소득지니계수가 제공되지 않거나 군소국가(룩셈부르크, 코스타리카 등)는 제외.
 2) 칠레는 2017년 수치를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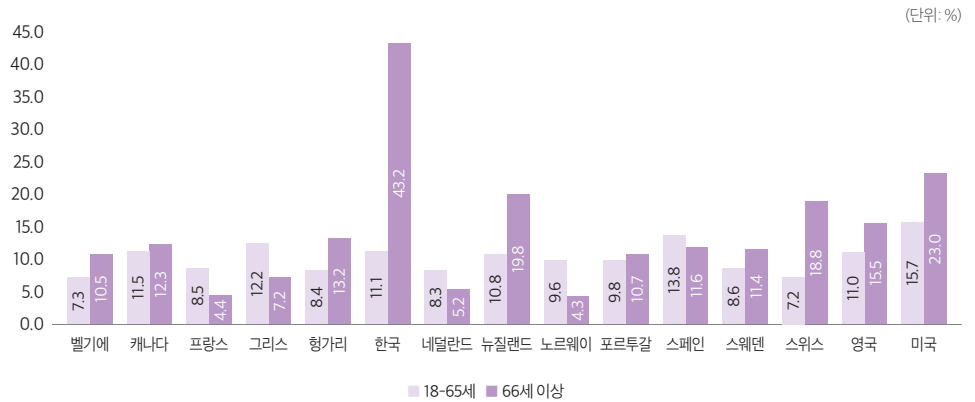
<그림 2> OECD 국가의 소득지니계수(2018년)

지니계수가 한 국가의 전반적인 소득분배 현황을 보여준다면, 빈곤과 관련한 지표는 정부 사회정책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인구 계층의 규모와 상태를 보여준다. 통상 빈곤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며 정책적으로는 빈곤의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 즉 빈곤선에 의해 정의된다. 사회정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빈곤 정의는 상대적 빈곤이며,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빈곤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은 개별 정책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삼았다. 빈곤선은 공공부조 정책의 기준이라는 정책적 의미를 가지며 빈곤율은 특정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전체 인구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아동과 같이 연령별 인구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중요하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으로는 21.3%이며 처분가능소득으로는 15.3%이다([그림 1]의 패널 B). 2011년과 비교하면, 시장소득으로 평가한 빈곤인구의 비율이 증가하였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하락하였다. 기초연금 등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 역시 유사한 추이가 확인된다. 특히 노인 인구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46.5%에서 2020년 38.9%로 7.6%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처분가능소득 노인 빈곤율의 하락은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에 따른 수급자 증가, 기초연금 지출 대상과 지급금액의 확대 등 고령층에 대한 복지 확대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0명 가운데 4명에 가까운 노인 인구(특히 76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2명 중 1명)가 빈곤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제도가 연령에 따른 빈곤 위험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크게 미흡함을 확인해 준다.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들과의 비교에서 그 뚜렷한 특징이 확인된다. [그림 3]에 따르면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지표의 경우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66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지표는 주요 선진국의 2~4배에 달한다. 2018년 기준 OECD 35개 국가의 상대적 빈곤율 중간값은 11.4%이며 노인 빈곤율 중간값은 11.1%이며, 평균값은 전체 인구 11.8%, 노인 인구 15.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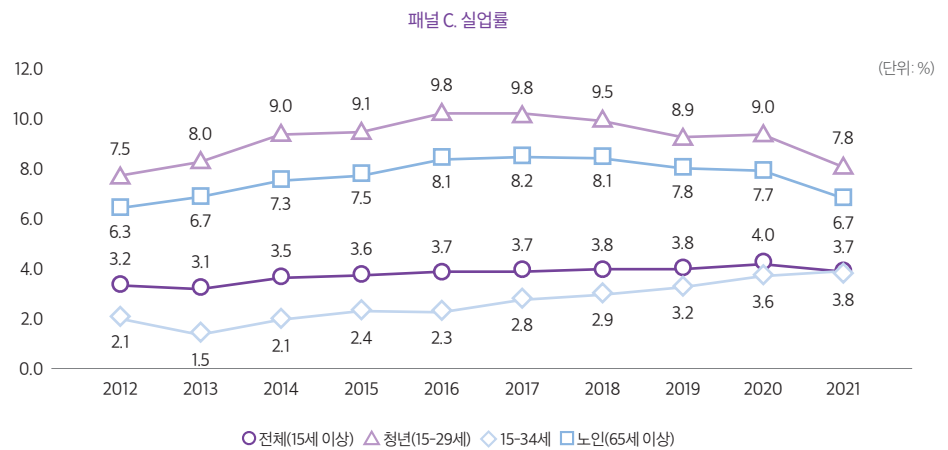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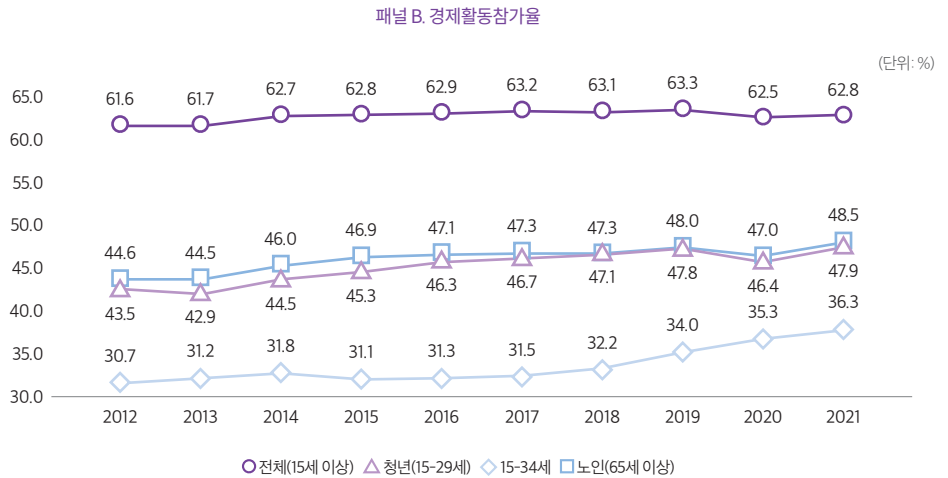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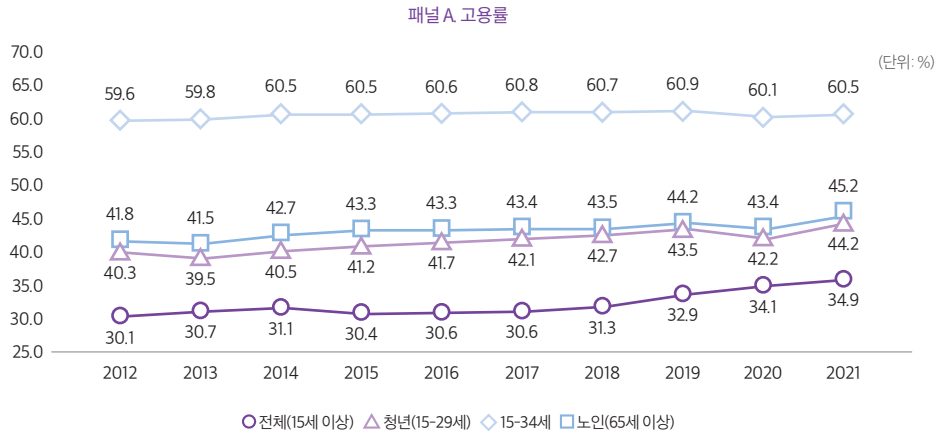


*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2022.9.4. 기준)(통계청, 『2022 고령자통계』, p.35에서 인용)
 * 주: 상대적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함.

<그림 3> OECD 주요 국가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2019년)

나. 고용지표

국민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은 고용률과 실업률을 통해 평가하였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중으로,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취업자 실업자) 중 실업자의 비중이다. 생산가능인구를 15~64세로 규정한 OECD와 달리 우리나라는 15세 이상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로 규정하고 고용률 산정에 적용한다. 이는 노후소득보장 제도가 성숙한 OECD 국가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고용지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분석의 일관성을 위한 국가 간 비교에서는 OECD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지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가별 노동시장의 구조적 차이를 감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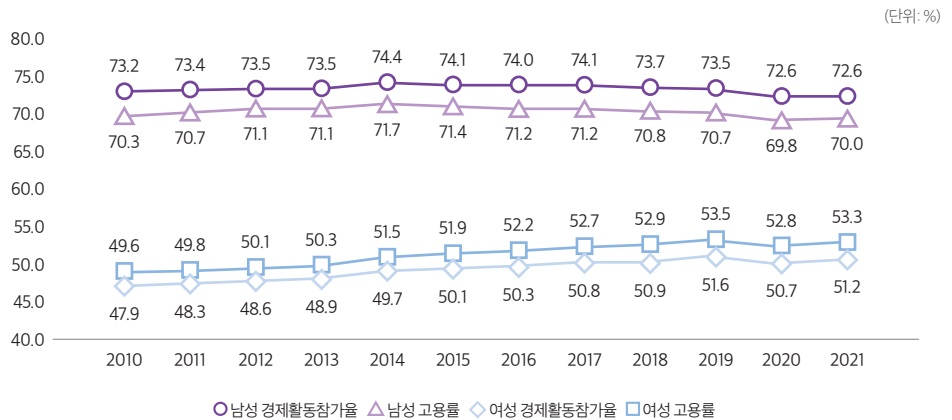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4> 한국의 연령대별 고용지표: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숙련의 성격, 고용의 형태에 따른 노동시장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하에서는 연령대별, 성별로 구분하여 고용지표를 설명한다([그림 4]와 [그림 5] 참조). 15세 이상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2021년 기준 60.5%로 지난 10년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이 44.2%로 과거에 비해 상승하는 추이지만 전체 고용률을 크게 밀치고 있다. 고령인구의 고용률은 2021년 34.9%로 조사되었다. 정년 이후에도 10명 중 3.5명의 노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빈약한 노인 복지제도로 인해 노인 10명 중 약 6명(2020년 기준 58.6%)이 시장소득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선 이하의 빈곤 상태에 처해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2021년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실업률은 3.7%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15~29세)은 7.8%, 노인(65세 이상)은 3.8%로 나타났다. 청년 실업률은 2010년대 중반보다는 낮아졌지만 다른 연령군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노인 고용지표의 경우 고용률과 실업률이 모두 상승하였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확대로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2년 30.7%에서 2021년 36.3%로 큰 폭으로 상승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인 고용지표의 경우 노인들이 민간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고용된 결과라기보다는 노인 빈곤문제에 대응하는 정부 공공부조사업의 결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5> 한국의 성별 고용지표: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2021년 성별 고용률의 경우 남성이 70.0%, 여성이 51.2%이다. 2010년 이후 남성 고용률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여성은 47.9%에서 3.3%p 상승하는 추세가 확인된다. 남녀 고용률의 격차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20%p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다. 여성 고용률의 변동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거의 유사한 패턴을 갖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생산가능인구에 속하는 여성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가 취업의사를 갖는 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 것이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배경으로 작동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 인구의 고용지표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4. 정부 대응정책의 문제점

소득분배 및 고용 관련 사회안전망 제도는 개인이 처한 위험의 유형에 따라 노년기 빈곤 문제에 대응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와 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소극적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구분된다. 해당 제도들은 재원의 조달 방식에 따라 기여 기반의 사회보험과 정부 재정으로 지원되는 공공부조사업으로 구성된다. 노후소득보장 제도로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공공부조사업으로 노인 인구의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있다. 실업과 관련한 사회안전망은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와 일자리 창출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고용보험 체계의 경우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수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기본계획」)은 소득보장 분야에서 우리나라 사회보장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낮은 사회복지지출 수준, 넓은 사각지대, 사회보험의 낮은 보장성 등을 지적하였다. 첫째,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사회지출의 가파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5년 기준 10.2%로 OECD 평균의 53.7%에 불과하였다. 낮은 사회복지지출은 先성장 後복지라는 성장 우선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사회투자에 소극적인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동 자료는 경제규모·성장률·인구 고령화 등의 요인을 고려한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지출 규모가 적정수준 대비 52~68%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최근 자료를 보면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2019년 12.2%로 2%p 상승, OECD 평균(20.0%)과의 격차를 소폭 줄인 것으로 확인된다.

두 번째 사회보험의 낮은 보장성을 살펴보자. 연금의 보장성은 소득대체율(연금액/전일제 근로자 전체 평균임금)로 측정한다. 「기본계획」은 국민연금의 2016년 기준 소득대체율이 39.3%로 OECD 평균인 40.6%에 근접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런데, OECD(2021)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1.2%인데 이 수치는 2019년 보고된 수치(37.3%)보다 무려 6.1%p나 낮다. OECD는 한국의 소득대체율 수정에 대해 기간 A값의 근로자 평균 소득을 잘못 적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참여연대, 2022). OECD 회

원국 강제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은 평균 42.2%로 우리나라와의 차이는 10%p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실업급여 역시 부족한 지급 수준 및 기간으로 인해 실업에 따른 소득 보장 수준이 극히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실업 이후 5년간 총 가처분소득 대비 실업급여 총액의 비중은 OECD 국가의 경우 28.8%임에 비해 한국은 10.3%에 불과하였다(2015년 기준). 실업급여의 낮은 보장성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다시금 노출시켰다.

세 번째는 넓은 사각지대의 문제이다. 국민연금의 상황을 보면 장기체납, 납부 예외에 따른 미수급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기존의 정부 발표자료(보건복지부, 2019)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2018년 기준 359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 대비 17.0%, 지역가입자 대비 48.1%에 달하였다. 고용보험 역시 비정규직, 특수고용인, 자영업자 등 실질적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2017년 기준 가입률을 보면 정규직은 85.9%에 달하지만 비정규직은 44.1%로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 그런데 서울대 구인회 교수팀이 행정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가 정부의 공식 자료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보고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18~59세 인구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6.2%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그간 알려진 것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특히 소득 하위 20%의 가입률은 51.7%로 상위 20%에 비해 17%p 낮을 뿐 아니라 평균 가입기간은 81개월로 수급 자격인 120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하였다(한겨레신문, 2022. 6. 6). 같은 해 고용보험은 전체 취업자 2,740만 명 가운데 약 절반만이 가입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실적과 노령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의 절반만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반쪽의 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공공부조 분야의 경우 2017년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비수급 빈곤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였다. 그러나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2018년 이후 4년간에 걸쳐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2021년 수급자는 164만 가구, 236만 명으로, 2017년에 비해 각각 60.4만 가구, 77.8만 명이 증가하였다.³⁾

3) 2017년의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수급 빈곤층은 중위소득 40% 이하의 약 93만 명으로 추정되었다(보건복지부, 2019).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사각지대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무엇보다도 고용 촉진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직접일자리 창출' 지원정책의 경우 일자리의 질이 낮고 한시적이어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직업역량 강화에 실효성이 낮았으며 참여자의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이지 않았다.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노동환경에의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의 경우 현재 일자리의 질에 따른 격차가 교육훈련의 기회에서도 되풀이되는 이중구조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한 취업자일수록 교육훈련에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교육훈련의 기회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결국 고용보험을 위주로 하는 사회안전망의 경우 소득보장과 고용지원 양 측면에서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지원과 고용 촉진을 연계하는 제도로 기존의 취업지원제도인 '취업성공패키지'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되었다. 동 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근로빈곤층에게 구직촉진수당 등을 제공한다. '취업성공패키지'와 비교하면 그 대상자가 장기실업자, 청년층,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대폭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 경험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대상자별로 취업장애요인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러나 이 제도 또한 대상자 외 가족이 있을 경우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대상 집단의 특성 파악을 통한 정확한 서비스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단기적 성과 달성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점 등 기존 제도의 한계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김태완, 2021).

5. 미래 정책 과제

소득 및 고용 분야의 사회안전망 제도와 관련한 미래의제 구성을 위해서는 현재 제도의 핵심적 한계와 정책환경의 변화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지표 분석과 정책평가를 통해 확인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환경 전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비교적 낮은 시장소득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낮은 공적 사회복지지출로 인해 처분가능소득의 불평등도가 높은 국가이다. 둘째, 국민연금의 미성숙에 따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그 결과 노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도 가장 낮게 나타난다. 셋째, 인구 집단별로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특히 청년층과 여성은 취업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고용률이 낮은 취업 취약계층에 속한다. 넷째, 한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소득과 고용의 안전성이 높은 계층에 대한 보호 수준이 높은 이중구조,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특징으로 한다. 다섯째, 급속도로 진행되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해 총부양비는 2020년 39명에서 2070년 117명으로, 노년부양비는 2020년 21.8명에서 2030년 38.6명, 2070년에는 100명을 상회할 전망이다. 여섯째, 제조업 분야에서 자본심화지수의 상승 속도가 가파르며 이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제도가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 의제로 삼아야 함은 자명해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과제를 미래의 정책환경 변화와 어떻게 조화시키는가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저부담-저복지 국가(국민부담률 26.7%,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10.8%)에 해당하지만, 연금제도 성숙, 인구구조의 급변, 저성장 등으로 인해 현행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2050년대 중후반이 되면 고부담-고복지 국가군으로 이행될 것으로 예측된다(국회예산정책처, 2021).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큰 복지제도의 경우 제도 성숙에 따른 지표 변화를 감안하여 복지제도의 동적 이동경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민연금이 현재 제도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제도가 성숙된다면 기초연금 등 여타 노후소득 보장제도는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다.

보다 심각하고 발본적인 문제는 복지체제를 지탱하는 기초변수(인구, 노동, 성장)의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재정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인구절벽과 초고령화, 성장둔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등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적 변화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정부 재원조달 역량을 제약할 수밖에 없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기준선)하에서 국민연금 적립금의 경우 2040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며 2055년에는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 결과를 제출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23)⁴⁾.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와 연동되어 있는 사회안전망 제도의 경우 한편으로는 현재 당면한 문제인 높은 빈곤율 문제에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라는 미래의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속가능 복지체제의 경우 국가의 전체 구성원들 간 타협과 조정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2022년 국회에 설치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⁵⁾와 같은 기구를 상설화하여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적 체계하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은 플랫폼 노동자, 킥 이코노미 종사자 등 비정형 고용형태를 증가시키며 이는 기존의 고용보험 체제와 같이 정형화된 제도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행정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우리나라 고용보험 가입률이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비정형 노동의 증가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최현수(2021)는 '자격-부과-징수-급여-서비스'로 이루어진 자격 중심 사회보험 운영체계가 갖는 한계가 가입 대상 업종의 단계적 확대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는 근로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근로자성과 전속성에 따른 근로자 분류가 어려워지고

4) 2022년 동 기관은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을 2043년, 기금 소진 시점을 2057년으로 추계한 바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22).

5) 국회 연금개혁특별위는 2022년 10월 연금재정 안정 및 4대 공적 연금 등의 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첫 회의를 시작하였으며 2023년 4월말로 활동이 종료된다.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된 연금개혁특별위의 활동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및 가입상한·수급개시 연령' 상향이라는 원칙을 담은 경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뿐 구체적 개혁방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연합뉴스, 2023. 3. 29). 특별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위원회 상설화 이외에 사회 각 계층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도 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고 있다.

“사업장이 없거나 다수의 사업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하면서 다양한 소득원을 가진 노동자들”(p.84)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라는 해법을 제안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1년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 Real Time Information)를 시행하였다. 일용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계층을 포함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월 단위 소득자료 파악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은 소득기반 고용보험과 재난 지원금 등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자료 제출주기를 기존의 연·반기·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여 매월 수집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최근 제도 시행 후 1년간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 방문판매원 등 비정형 근로자 670만 명에 대한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발표하였다.⁶⁾

실시간 소득 및 매출 정보를 기반으로 국세청이 사회보험을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고용보험만이 아니라 사회보험 전체를 통합하는 ‘소득 중심 전 국민 사회보험’이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최현수(2021)는 새로운 사회안전망 패러다임이 “국민 누구나 경제활동을 통해 획득하는 소득·매출 정보를 기반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수급권을 확보하여 급여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진정한 고용·사회안전망의 강화”(p.89)라고 설명한다. ‘소득 중심 전 국민 사회보험’은 고용보험의 테두리를 벗어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미래의제이다. 따라서 복지수준과 재정부담의 경로 선택을 위한 미래의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통해 그 필요성과 방향성, 세부 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6)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승계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정과제에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현 정부하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의 실현은 불투명해진 상태이다.

참고문헌

- 국회에산정책처(2021),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NABO Focus』 제30호.
 _____(2022),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_____(2023),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 김태완(2021), 「탈빈곤을 위한 복지와 고용서비스」, 『사회혁신과 지역복지공동체』 13호.
- 민보경 외 (2021),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 및 모니터링 방안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_____(2022), 『정부의 미래대응 정책 모니터링』, 국회미래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9),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2019. 2. 12.
- 연합뉴스 (2023. 3. 29.), 「'지지부진' 연금개혁...공 넘겨받은 복지부, 10월 개혁안 초안」,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9090000530>
- 정준호 (2018), 「한국성장체제의 유산과 쟁점」,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쟁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pp. 11-35.
- 정준호·전병유 (2019), 「혁신과 연대를 위한 산업·노동체제의 평가와 과제」, 『대한민국, 상생과 연대의 길을 찾다』, 공공상생연대기금 토론회 자료집, 2019. 12. 6.
- 참여연대 (2022), 「[공적연금 이슈리포트②] 1998년생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하락한 이유」,
 2022. 5. 3.,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881532>
- 최현수 (2021), 「고용보험만이 아닌 '소득 중심의 전 국민 사회보험' 실현을 위한 '월 단위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과 국세청 사회적 징수 체계 통합」, 『계간 사회적 대화』, 2021-1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통계청 (2021),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 한겨레신문 (2022. 6. 6.), 「저소득층, 국민연금 절반만 가입...60%는 최소가입기간 못채워」,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45851.html>
- Acemoglu, D. and Robinson, J.**(2012),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Currency.
- Aghion, P., Carol, E., and Garcia-Penalosa, C.**(1999),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The Perspective of the New Growth Theori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7(4).
- Karabarbounis, L. and Neiman, B.** (2014), "The Global Decline of the Labor Shar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9(1), pp. 61~103.

OECD (2021), 『Pensions at a Glance 2021』.

Rodrik, D. (1999), “Where Did All the Growth Go? External Shocks, Social Conflict, and Growth Collapses,” *Journal of Economic Growth*, 4(4).

Wilkinson, R. (2018), *The Inner Level: How More Equal Societies Reduce Stress, Restore Sanity and Improve Everyone’s Well-being?*, Allen Lane.

World Bank (2005), 『World Development Report 2006: Equity and Development』.

국가미래전략 Insight 발간현황

발행일	제목	작성자	vol
2023.04.17.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소득과 고용 분야 정책지표 : 현황과 과제	이선화	66
2023.04.10.	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나리오와 미래전략	김은아	65
2023.03.20.	한국 청년은 언제 집을 떠나는가 : OECD 국가 비교	이상직	64
2023.03.06.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새로운 전환점 :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	여영준	63
2023.02.27.	노동 안전 분야의 마그나카르타, 로벤스 보고서 누가, 왜, 어떻게 만들고 실현할 수 있었나	박상훈	62
2023.01.09.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	국회미래연구원	61
2023.01.02.	'양극화' 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박현석	60
2022.12.12.	인재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방향 : 학습지원 방향 및 진단지표 개발	성문주	59
2022.11.28.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민보경	58
2022.11.14.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시사점 :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	정 훈	57
2022.10.3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정책과 회복탄력적 혁신전략	여영준	56
2022.10.24.	일본의 청년정책 : 한국과 비교의 관점에서	정혜윤	55
2022.10.17.	대통령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박상훈	54
2022.09.19.	이머징 이슈 탐색 플랫폼의 이해와 활용	김유빈	53
2022.09.05.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	유희수·우해봉	52
2022.08.22.	국내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이해관계자 분석	정 훈	51
2022.08.08.	한국인의 분배 인식 : '능력주의' 논의에 대한 시사점	이상직	50
2022.07.25.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적 전략 구상	이선화	49
2022.07.11.	1인 가구의 행복 분석	민보경	48
2022.06.13.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 : 소득 수준과 빈곤 경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이채정	47
2022.05.30.	노동시장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제언	성문주	46
2022.05.16.	미래 전망의 프레임과 개선안	박성원	45
2022.05.02.	'국가'와 '국민'을 줄여 써야 할 국회	박상훈·문지혜·황희정	44
2022.04.18.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과 적응입법 아젠더	김은아	43
2022.04.04.	디지털전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사회의 중장기 변화 전망과 시사점	여영준	42
2022.03.21.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시사점	이선화	41

발행일	제목	작성자	vol
2022.03.07.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 한국 법인세율 결정과정 분석	박현석	40
2022.02.21.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 교육아젠다 10선	김현곤	39
2022.02.07.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허중호	38
2022.01.24.	장애인 운동 20년, 장애 입법 20년: '이동권'에서 '탈시설'로	이상직	37
2022.01.10.	미래비전 2037 -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	김유빈	36
2021.12.30.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분석	정 훈·여영준	35
2021.12.23.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완화와 적응	민보경	34
2021.12.16.	저출생·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아동 및 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 시설의 분포 분석을 중심으로	이채정	33
2021.12.09.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방향 탐색	성문주	32
2021.11.18.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	이선화	31
2021.11.04.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조해인	30
2021.10.21.	디지털화폐의 등장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전망	박성준	29
2021.10.07.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미래 정책과 국회	박현석	28
2021.09.16.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여영준·조해인·정 훈	27
2021.09.03.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주요 이슈와 제언	성문주	26
2021.08.19.	어디 사는지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까?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행복요인	민보경	25
2021.08.05.	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미래를 위한 혁신 정책의 대전환	전 준	24
2021.07.22.	대량 문헌탐색 기반 이머징 이슈 도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분석 사례	김유빈	23
2021.07.08.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자살률	박상훈	22
2021.06.24.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	박성원	21
2021.06.10.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김현곤	20
2021.05.27.	인구감소시대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	이채정	19
2021.05.13.	일하는 국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	조인영	18
2021.04.29.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허중호	17
2021.04.15.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개혁의제 제언	이선화	16
2021.04.01.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여영준	15

발행일	제목	작성자	vol
2021.03.18.	국내의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정 훈	14
2021.03.04.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 GDELT를 중심으로	박성준	13
2021.02.18.	코로나19와 함께 한 1년 :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허종호	12
2021.01.21.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성문주	11
2021.01.07.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민보경	10
2020.12.24.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박성원·김유빈	9
2020.12.10.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영준	8
2020.11.26.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국내 연구·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아	7
2020.11.19.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박성원·정영훈	6
2020.11.12.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김현근	5
2020.10.15.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박상훈	4
2020.09.17.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김홍범	3
2020.09.03.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박성원	2
2020.08.20.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회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	김유빈	1

•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